

금남로에서

정재현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42.195km의 먼 거리를 달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불확실성, 아무리 바빠도 한걸음 딛지 않고 다음 걸음을 디딜 수 없는 절차의 진리,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 등이 인생살이와 비슷하기 때문인 듯 싶다.

한데, 지구력이 생명인 마라톤은 힘이 아닌 균형의 스포츠라고 한다. 힘, 즉 다리 근력만으로 달리면 완주할 수 없고 빨리 달릴 수도 없다. 발-무릎-허리로 이어지는 신체의 각 부위를 작지 순간에 적정 각도로 맞추는 균형을 이뤄야 자체적으로 탄성을 받아서 추진력이 생긴다.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추진력은 힘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탄성'이다

총선 민심 경고 외면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넉 달도 안돼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인사 파동과 촛불 집회, 릴레이 파업, 고위

가·고물가에서 벗어난 생계형 아우성,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출범 초창기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대적인 정부는 없었다. 대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명박 정부에 대

'균형의 리더십'을 바란다

한 경고등은 지난 4·9 총선 때부터 켜졌다. 비록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패했다. 지방 민심이 이미 등을 돌린 것이다. 그때라도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지금의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과반수 의석 획득에 자만한 나머지 지방의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덜컥 미국산 쇠

고기 수입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수도권 규제 완화, 대운하 건설, 공기업 민영화, 교육 자율화 등을 밀어붙였다. 어떤 의견 수렴의 절차나 과정 없이 불도저식으로 쏟아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은 범 국민적인 '촛불집회'를 불러왔다. 이때라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총체적 난국에 빠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정부는 촛불 속에 담긴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촛불집회로 불만을 이룬 민심의 독은 급기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터졌다.

지금의 이 혼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국민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이념적 성향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고루 잘살고 대접받는 정치를 원할 뿐이다. 성장률 몇 % 달성과 같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일상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 살리기를 바란다. 균형과 상생의 지도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국민요구는 균형 정책

곧 단행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에서 대통령의 선택이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다. 좌우와 지역, 출신을 뛰어넘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국정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걸 밀고 나갈 역량 있는 인물을 고르되, 특정 지역·종교·학교나 부자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을 쓰라는 말이다. 필요하다면 반대편 사람도 과감히 중용(重用)하라.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완주를 위해서는 균형의 지도력이 절실하다. 이 대통령은 선택과 포용의 정치,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로 궤도를 수정해야 5년 후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의 영광의 월계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기고

김석주



바른 마음의 소유자라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말을 사용을 생활화하면서 멋진 삶을 영위 하자는 것이 '바바바 실천운동'의 요지다.

우리 조상은 아무리 생활이 고달라도 아침에는 희망으로 살았고, 낮에는 노력하고 살았으며, 밤에는 반성의 자세로 마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살았다. 특히 선비들과 공직자의 생활태도를 살펴 보면 권리자로서의 행세보다는 항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묵묵히도 초개처럼 버렸는데, 지금은 어떤가?

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기가 막힐 뿐이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대립과 분열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 석가, 공자가 주장하는 이념들은 서로 다르지만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다"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궁극의 목적은 하나였으며, 이 성인들은 모두가 마지막 말을 아끼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말 속에는 행복의 씨앗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의 힘이 강함을 알았고, 나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언어 세계는 거친 말과 거칠거칠이 춤을 추며 흥한 싸움

'바바바' 실천운동을 아십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리는 좋아해도, 의무를 좋아했다는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의무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의무도 정해 놓은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싫은 것이 당연하고, 군인들은 군 입대라는 말조차도 듣기가 싫었을 것이며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면서 멋진 곳 찾아 맛있는 음식 골라 먹으며, 사랑을 숨기고 있는 여자들을 술과 돈으로 유혹하여 사랑의 마침표나 찍어 보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지구촌의 실상일 것 같은데 내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다. 선진국일수록 의무이행이 자발적이고, 숭신 적이지만, 후진국일수록 의무이행보다는 권리주장이 앞장서고 있으니 이 또한 길이 생각할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도 '목소리 큰 놀이 이긴다'는 말이 속담 1호 또는 한국의 격언이 되어 가고 있으니 부끄

터처럼 변해가고 있으니 이를 정화하려면 하루빨리 '바바바 실천운동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부도덕이란 일시적으로 만족을 가져오기도 하고,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스스로 병들게 하고 파멸의 길로 자초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 언제 어디서나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당장 듣기에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무용한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의무감조차 느끼지 못하며, 권리자로서만 행세하려 하지 말고 '바바바 실천운동'에 동참하자고 또 한번 권유한다. 왜냐하면, 바른 마음 뒤에는 반드시 바른 행동이 따라다니고,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바르며,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통문화교육원·향원당생태병원 이사장>

지자체·학교 등 지역 농산물 사용 의무화 했으면

향토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도들이 농산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학교, 공공기관, 기업들이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면 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농수산물·식품산업·소비기업간 연관성이 매우 낮았다. 김치산업만 해도 배추·무·고추같은 원료를 충분히 생산하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전부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질 농산물을 수입해 급식에 사용했다. 그러다보니 지역별 로 가진 독특한 맛과 전통을 잊지 못하고 농

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다른 향토농식품 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음식점의 경우 일부는 상어나 상포에 지역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주원료를 외국산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전에는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공공기관·기업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주한·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시설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재검토해야

오는 7월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앞두고 의장단 선출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교황 선출방식으로 치러지는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물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교황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후보 등록이나 소견 발표 등의 절차는 없이 모든 시의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투표를 하게 된다. 당연히 공약이 있을 수 없고 의회를 이끌어갈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지 검증할 기회도 없다. 민주적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부작용은 심각하다. 후보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 답답과 뒷거래 등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비방과 음해성 소문이 떠돌고 거리가 멀어 뭉쳐 갈등을 빚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감투싸움과 나눠먹기 등 뒷맛이 짙지 않고 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 등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의장단선거와 관련, 어제 성명을 내고 선거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황식 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고 선거 과정으로 인해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의장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도 보냈다.

의장단은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다' 자리가 아니다. 선거는 후보등록을 거쳐 공약을 발표하고 검증 받는 등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장에 뜻이 있으면 지역 현안이나 의회 운영 등에 소신을 밝히고 심판을 받는 것이 떳떳하다.

밀실에서 답합과 뒷거래 등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전반기 의장단선거 때도 밥그릇 싸움으로 파행을 빚었던 심각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는가. 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꾸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재해위험지구 '능장' 복구공사 언제까지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장마가 예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빨리 찾아온데다 7월 하순까지 장마가 끝나더라도 8월에 국지성 호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보다. 그 어느 때보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전남지역만 해도 재해 위험지역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태풍 '나리'의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경우 예산부족 등으로 복구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곳이 있어 풍수해 재발생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건설기계 노조의 파업까지 겹쳐 재해 방지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침수피해가 컸던 보성군 벌교읍내 시가지와 화순 내남면 등은 중앙재해심사위의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복구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난위험지역은 어제오늘 지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곳이 위험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국의 되풀이 되는 예산타령 속에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기상재해는 철저히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뒤 아무리 신속하게 대응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관한 예산과 인력 등을 충실히 확보하고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장마철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지구촌 곳곳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도 면세유값이 급등한 것은 물론 서민 연료라 할 수 있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다.

우리가 고유가에 고통을 치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전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펄박질은 수십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석유의 가채연수가 40년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이미 2000년부터 나왔었다. 그 예측이 잘못돼 가채연수가 수년 또는 십수년 길어진다 하더라도 석유자원의 고갈이라는 대명제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체연료의 개발이나 자원외교에 소홀한 게 사실이다. 선진국들이 매년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대체연료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고작 4%대에 불과하다.

전망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는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고, 원자력 발전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증설이 막히

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이야말로 에너지 활로를 뚫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 나무조각이나 밀짚과 같은 농업 쓰레기를 먹고 원유를 배출하는 '유전자 변형 벌레'를 생산해내기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다. 과학자들이 벤처기업과 손잡고 배럴당 140달러에 달하는 원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회자중 하나인 LS9도 획기적인 벌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크기는 개미의 10조분의 1에 불과한 단세포 유기체로 '오일 2.0'으로 불리는 원유를 만들어내게 된다.

LS9는 대량생산할 위해 1천ℓ 용량의 발효장치를 만들어 냈는데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실험실에서는 '벌레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허황된 얘기만은 아닐성 싶다. 우리도 이런 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 고유가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벌레 연료'



은편칼럼

박행순



요즘 같은 참살이 시대에 회식자리의 인기있는 건배사가 '구구팔팔이삼사'이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삼십만 않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데 이는 차마나 식물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수도 있다.

지난 5월 여러 일간지에는 식물인간이 된 칠순노모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존엄사'와 '안락사'가 함께 쓰였고 환자상태는 '뇌사(腦死)' 또는 '식물인간'이라고 하였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최신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생명을 연장시키

기에 의존하여 수일, 길어도 2~3주 안에 사망한다.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가 eu (well, good)와 thanatos(죽음)에 어원을 두었기에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이라는 뜻에서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와 혼용되기도 한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수반, 환자의 의사 반영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건 존엄사 건 현행 법상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1월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아이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현대의술은 뇌사상태 환자의 각막, 심장, 간장, 췌장, 신장 등을 다른 환자들에게 이식하여 여러 사람을 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죽음을 '진정한 존엄사(death with true dignity)'라고 불러 '존엄사(death with dignity)'와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장기기증은 뇌사판정이 후 사망 전까지만 가능하며 식물인간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존엄사와 관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마태복음에는 1 달란트를 맡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이윤을 내지 않았다가 주인에게 크게 책망 받는 내용이 나온다. 뇌사자의 장기를 땅에 묻을 것인가 또는 장기를 기증하여 이웃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1 달란트를 맡은 종의 선택이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다. <전남대 약대 교수·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은편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버스·지하철 승 광고 자제해야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주 광고를 쉽게 본다. 대중교통에는 성인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타는데 이들 눈에 소주 동영상 광고나 포스터 광고가 어떻게 보여질까.

대중교통의 광고는 운행시간으로 볼 때 하루 20시간 가까이 계속된다. 이 정도면 광고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의 폐해는 이미 전세계가 주목하는 일이라 흡연 인구가 많이 줄었다. 또한 담배갑에는 폐암 발생 경고문구 등 적극적인 금연 캠페

인이 전개되고 있다. 그 덕분에 흡연 인구가 줄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술에 대해서만 관대한 지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와 대중교통 회사들은 회사 이익만 따지지 말고 공익업체로서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亨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廣州廣域市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